

KRILA Focus
2012. 10



걷는 길 조성사업의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Summary

빠름에서 느림, 소유에서 존재 등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일반인들의 걷기 여행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올레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걷는 길 조성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의 걷는 길 조성사업의 현황을 정부부처별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선진 국외사례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또한 걷는 길 조성사업의 추진 실태를 계획 및 조성, 운영 및 관리, 법제 기반 등 부문별로 파악한 후,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한다.

-
- I.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걷는 길 조성사업 _ p2
 - II. 걷는 길 조성사업의 정부부처별 추진 현황 _ p3
 - III. 걷는 길 조성사업의 국외사례 _ p8
 - IV. 걷는 길 조성사업의 추진 실태 _ p15
 - V. 걷는 길 조성사업의 개선 방안 _ p21

KRILA Focus 제52호(2012. 10)

내용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도형 연구원
02-3488-7348 / enscape@krila.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99)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걷는 길 조성사업의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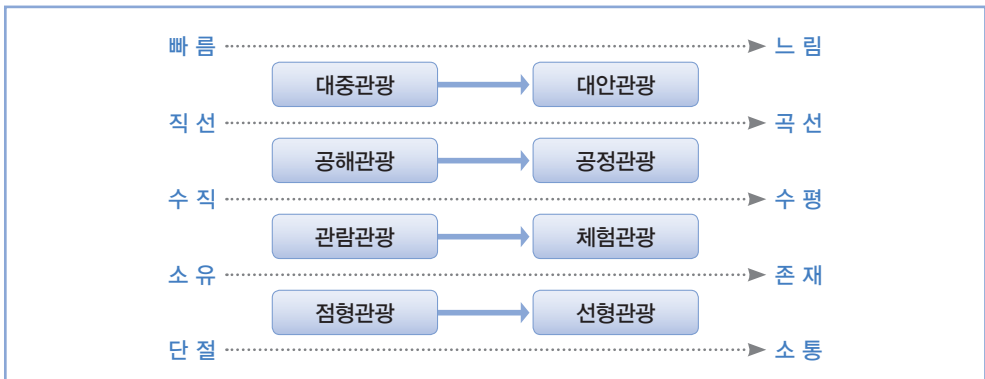
김도형 (연구원)

걷는 길 조성사업의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I.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걷는 길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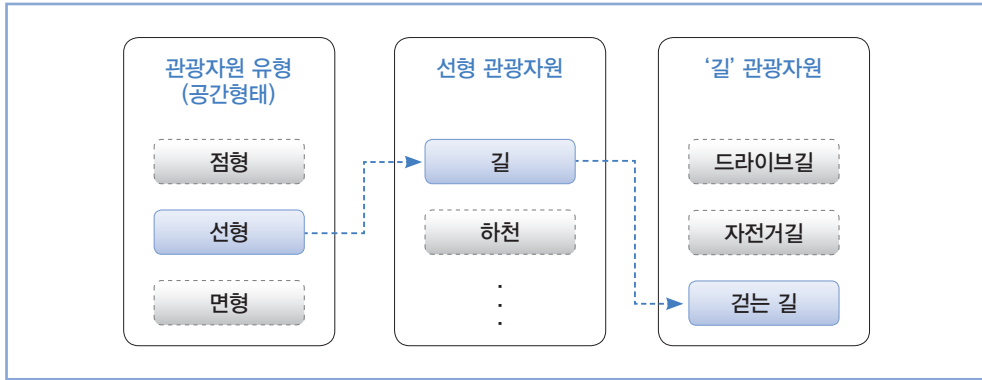
- 최근 관광객들의 취향이 변화하면서 슬로시티와 체험관광 등과 같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음
 - 특히 제주도의 올레길이 상당한 붐을 일으키면서 일반인들의 걷기에 대한 관심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올레길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다양한 걷는 길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2007년 산림청의 산림문화체험숲길을 시작으로 환경부의 생태탐방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 국토해양부의 누리길 등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걷는 길 조성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문화와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 걷는 길 조성사업은 걷기 열풍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인프라를 조성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점형(spot) 관광자원 개발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선형(linear) 관광개발로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관광자원의 선형 연계는 특정한 주제를 갖고 일정한 코스를 여행하는 도보관광의 형태로 나타나며, 지역의 이야기가 반영된 길이 발굴된다면 도보관광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 지역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수요자 취향에 적합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관광자원으로서 걷는 길의 위상



II. 걷는 길 조성사업의 정부부처별 추진 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보여행의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여행문화를 창출하며 친환경 관광상품을 확충하기 위해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문화생태탐방로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를 이야기로 엮어 국내·외 도보여행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여행 길’을 의미함
- 2009년 3월에 발표한 「문화생태탐방로 기본계획」에 의하면, ‘자연과 사람, 마을과 문화가 어우러져 품격 있는 문화스토리가 흐르는 길’을 문화생태탐방로의 비전으로 제시함
 - 관광적 측면에서는 국내관광의 활성화 및 새로운 여행문화 선도를, 지역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이미지 제고를, 이용자 관점에서는 의미 있고 질 높은 여행 경험의 제공을, 관리적 관점에서는 자연·문화관광 자원의 효율적 선형 관리를 목표로 함
- 2009년부터 해마다 선정하는 문화생태탐방로는 걷기여행 작가, 생태전문가, 탐방로 및 관광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가 심사에 참여하며, 서면심사와 현지답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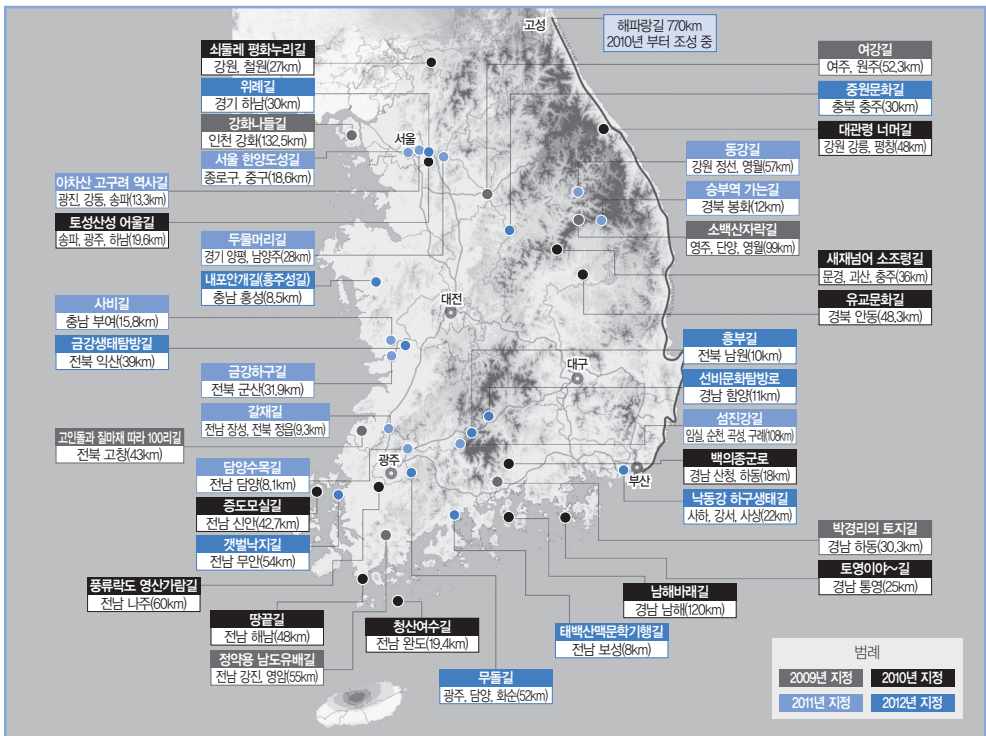
- 현재 서울 한양도성길, 해남 땅끝길,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 안동 유교문화길, 해파랑길 등 전국에 29곳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음

선정연도별 문화생태탐방로 현황

2009년	① 소백산 자락길(충북 단양, 경북 영주) ② 강화해협을 따라가는 역사대대길(인천 강화) ③ 심도기행길(인천 강화) ④ 삼남대로를 따라가는 정약용의 남도유배길(전남 강진, 영암) ⑤ 영덕 동해블루로드 (경북 영덕) ⑥ 삼척지방 관동대로 따라가는 길(강원 삼척) ⑦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경남 하동) ⑧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00리길(전북 고창) ⑨ 여강(남한강)을 따라가는 역사문화체험길(경기 여주, 강원 원주)
2010년	① 땅끝길(전남 해남) ② 새재넘어 소조령길(충북 괴산, 충주, 경북 문경) ③ 대관령 너머길(강원 강릉, 평창) ④ 백의중군로(경남 산청, 하동) ⑤ 토성산성 어울길(서울 송파, 경기 광주, 하남) ⑥ 쇠돌레 평화누리길(강원 철원) ⑦ 토영 이아~길(경남 통영) ⑧ 남해 바래길(경남 남해) ⑨ 청산여수(靑山麗水)길(전남 완도) ⑩ 증도 모실길(전남 신안)
2011년	①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서울 광진) ② 사비길(충남 부여) ③ 서울성곽길(서울 종로, 중구, 성북, 서대문) ④ 금강 하구길(전북 군산) ⑤ 갈재길(전북 정읍, 전남 장성) ⑥ 섬진강길(전북 임실, 순창, 전남 곡성, 구례) ⑦ 동강길 (강원 정선, 영월) ⑧ 두물머리길(경기 양평, 남양주, 구리) ⑨ 승부역 가는 길(경북 봉화) ⑩ 담양 수목길(전남 담양)
2012년	① 내포안개길(충남 홍성) ② 선비문화탐방로(경남 함양) ③ 태백산맥 문화기행길(전남 보성) ④ 흥부길(전북 남원) ⑤ 위례길(경기 하남) ⑥ 중원문화길(충북 충주) ⑦ 낙동강 하구 생태길(부산) ⑧ 무돌길(광주, 전남 화순, 담양) ⑨ 금강생태탐방길(전북 익산) ⑩ 갯벌 낙지길(전남 무안)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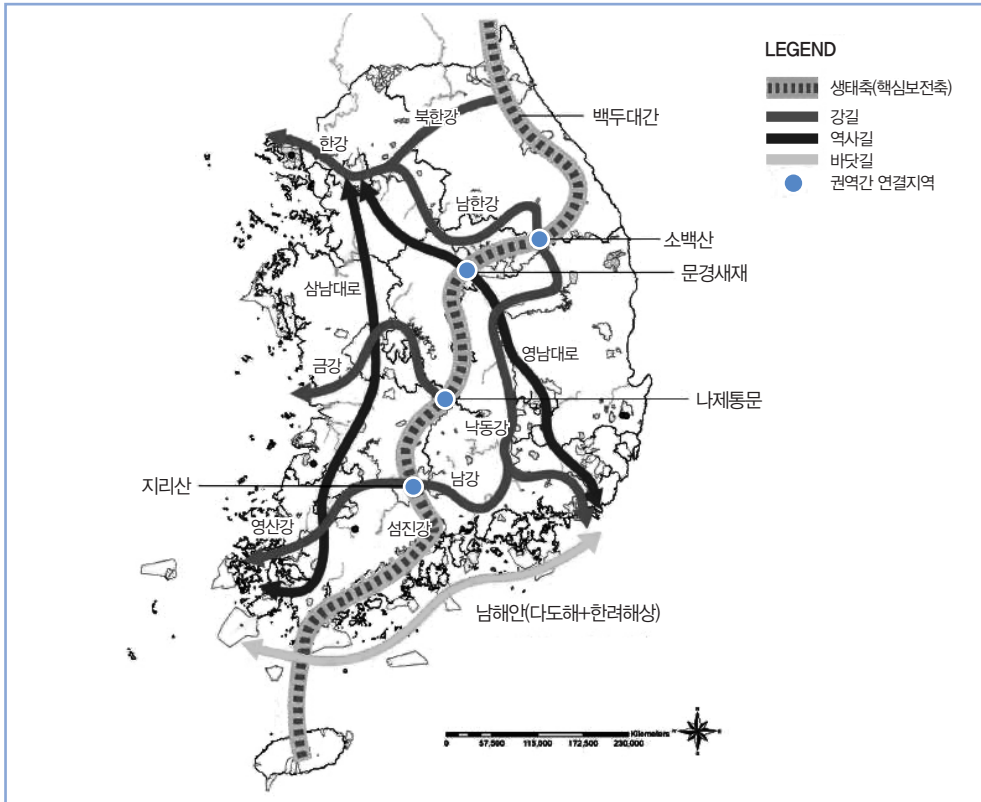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 현황



2. 환경부의 생태탐방로

- 환경부는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탐방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생태탐방로란 '전 국토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체계적으로 선정·조성·관리하는 도보 위주의 길과 그 시스템'을 의미함
- 2007년 10월에 수립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계획」에 의하면, 생태탐방로는 탐방자원을 연결하는 길의 특성에 따라 숲길, 강길, 해안길, 마을길, 바닷길 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공간단위 위계에 따라 전국, 권역, 지역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고, 이들 차원에 따라 각각 전국 생태탐방로 네트워크 기본구상, 권역별 생태탐방로 기본계획, 지역별 생태탐방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환경부의 생태탐방로 노선계획안



- 전국단위 국토생태탐방로 네트워크는 국립공원, 철새도래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중요한 생태탐방자원이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의 5대강과 영남대로, 삼남대로 등의 옛길을 통해 연결되는 것임

- 환경부는 2008년 경북 안동시의 퇴계 오솔길을 대상으로 한 시범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지정·추진해 오고 있음

선정연도별 생태탐방로 현황

2008년	① 퇴계 오솔길(경북 안동) ② 청량산이나리강변길(경북 봉화) ③ 만경강 생태탐방로(전북 완주)
2009년	① 영산강 일대(전남 나주) ② 용천사 일대(전남 함평) ③ 황룡강 일대(전남 장성) ④ 해안생태문화탐방로(전북 부안) ⑤ 낙동강 생태탐방로(경북 상주)
2010년	① 연구공원생태문화탐방로(강원 춘천, 홍천) ② 동려23선로(강원 화천) 솔향기길(충남 태안) ③ 금강생태문화탐방로(전북 군산) ④ 에코 테라피 트레일(전남 화순) ⑤ 소천만 백리길(전남 순천) ⑥ 돌산생태탐방로(전남 여수) ⑦ 청도 신화랑운문 에코트레일(경북 청도) ⑧ 왕피천 생태탐방로(경북 울진) ⑨ 우포늪생태탐방로(경남 창녕) ⑩ 제주올레길 조성사업(제주 서귀포)
2011년	① 갯골생태문화탐방로(경기 시흥) ② 에코뮤지엄트레일(강원 영월) ③ 파로호수변생태탐방로(강원 양구) ④ 고창선사문화탐방로(전북 고창) ⑤ 명품테마생태문화탐방로(전남 장흥) ⑥ 퇴계 오솔길(경북 안동) ⑦ 황매산생태문화탐방로(경남 합천)
2012년	① 임진강변 생태탐방로(경기 파주) ② 곡성섬진강 물따라 300리 나들길(전남 곡성) ③ 진양호 자연생태문화탐방로(경남 진주) ④ 거제생태문화탐방로(경남 거제)

* 자료 : 환경부 내부자료

* 2008년에 생태탐방로로 선정된 퇴계 오솔길은 2011년도에도 재선정되어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음

3. 국토해양부의 누리길

-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누리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산책탐방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장소를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누리길의 노선은 지역주민들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는 환상(環狀)형을 기본으로 하되,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도가 낮은 평지 위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국토해양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10개씩 누리길을 선정해 왔음

선정연도별 생태탐방로 현황

2010년	① 문화생태 누리길(인천 남동) ② 안산 장하동 누리길(경기 안산) ③ 청계산-백운 누리길(경기 의왕) ④ 고양 누리길(경기 고양) ⑤ 회동수원지 누리길(부산 금정) ⑥ 팔공산 누리길(대구 동구) ⑦ 황룡강 테마 누리길 (광주 광산) ⑧ 담양 가사문학누리길(전남 담양) ⑨ 둘레산 누리길(대전 동구, 대덕) ⑩ 성안 누리길(울산 중구)
2011년	① 계양산 누리길(인천 계양) ② 부천 누리길(경기 부천) ③ 시흥 누리길(경기 시흥) ④ 수영강 누리길(부산 금정) ⑤ 달성 누리길(대구 달성) ⑥ 동명면 누리길(경북 칠곡) ⑦ 노루벌 누리길(대전 서구) ⑧ 노안면 누리길(전남 나주) ⑨ 중구 누리길(울산 중구) ⑩ 장복산 누리길(경남 창원)
2012년	① 양주 누리길(경기 양주) ② 양평 누리길(경기 양평) ③ 광고 누리길(경기 수원) ④ 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부산 금정) ⑤ 양산 누리길(경남 양산) ⑥ 천주산 누리길(경남 창원) ⑦ 어등산 탐방누리길(광주 광산) ⑧ 견고섬은 누리길(광주 북구) ⑨ 만연산 누리길(전남 화순) ⑩ 계룡산 생태탐방 누리길(충남 계룡)

*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4. 산림청의 숲길

-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숲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산림청이 말하는 숲길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을 의미함
- 숲길은 산림청이 정의한 길의 목적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이들 숲길의 다섯 가지 유형은 그 노선 형태에 특징이 나타나는데 등산로와 트레킹길은 각각 수직적 선형과 수평적 선형을 보이고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은 수직과 수평이 복합적으로 나타남
- 보고에서 말하는 ‘걷는 길’은 숲길의 두 번째 유형인 트레킹길의 개념에 가장 근접함
 - 트레킹길은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길을 의미함
 - 이 길은 다시 둘레길과 트레일 등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지리산둘레길, 편지불둘레길, 울릉도둘레길 등과 같이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이고, 후자는 낙동정맥트레일, 금강소나무숲길처럼 산줄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은 길을 말함
 - 산림청은 2010년 2월 23일 「트레킹숲길 네트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백두대간·비무장지대(DMZ)·낙동정맥·남부횡단·서부종단 트레일 등 5대 트레일과 5대 명산 둘레길을 근간으로 전국을 잇는 트레킹길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임

- 2009년 국유림 지역에 숲길의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금강소나무 군락지인 울진 소광리 지역에 ‘금강소나무숲길’을 조성하였고, ‘지리산둘레길’은 ‘사단법인 숲길’이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2007년부터 조성해 왔음

선정연도별 숲길 현황

2007년	① 지리산둘레길(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산청, 함양)
2008년	-
2009년	① 금강소나무숲길(경북 울진) ② 낙동정맥트레일(경북 봉화, 울진, 영양,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군위) ③ 울릉도둘레길(경북 울릉) ④ 곡성숲길(전남 곡성)
2010년	① 편지불둘레길(강원 양구) ② 둔·가리 약수숲길(강원 인제) ③ 한라산둘레길(제주) ④ 무장애숲길(부산) ⑤ 내포문화숲길(충남 서산·홍성·예산·당진)
2011년	①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경북 안동, 구미, 상주, 문경,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예천) ② 봉좌산숲길(경북 포항) ③ 강릉녹색숲길(강원 강릉) ④ 서울둘레길(서울) ⑤ 서울근교산 자락길(서울)
2012년	① 부산둘레길(부산) ② 불국산트레킹길(경기 양주) ③ 장성둘레길(전남 장성) ④ 울릉도·독도트레킹(경북 울릉)

* 자료 : 산림청 내부자료

III. 걷는 길 조성사업의 국외사례

1. 일본의 장거리자연보도(長距離自然歩道, Long-Distance Nature Trails)

- 환경성이 1970년 영국의 도보길(footpath)¹⁾ 사례를 도입하여 조성한 탐방로로서 총연장 길이는 2만 2천여km에 달함
 - 도카이(東海)를 시작으로 규슈(九州), 추코쿠(中國), 시코쿠(四國), 수도권(首都圈), 토호쿠(東北), 추부호쿠리쿠(中部北陸), 킨키(近畿) 등 8개 광역경제권이 순차적으로 조성되어 2012년 현재 홋카이도(北海道) 권역의 자연보도가 정비 중에 있음
- 특별한 관광자원이 발굴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의 길을 자연보도로 정비하거나 새롭게 노선을 선정할 수 있음

1) 영국의 내셔널트레일 가운데 한 형태로 순수하게 걷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말이나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은 허락되지 않는 길을 말한다.

- 자연보도 지정의 기본방향은 이용과 체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조성하고, 개발가능지의 적극적 이용과 보호지역의 보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며, 이용자의 연령을 폭넓게 구성하는 것임
- 노선의 선정은 ① 네트워크 체계로서의 연결성 강화 ② 이용구간의 중점 정비 ③ 주요 도시, 관광 거점, 공공 교통수단 시·종착지에서의 접근성 고려 ④ 매력적인 자원, 기존의 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노선의 선택 등을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음
- 환경성이 장거리자연보도의 조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보도의 정비와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함
 - 자연보도의 실제적인 운영·관리 주체는 도도부현 지방자치단체이며, 보통 10년 단위로 지가의 변화를 고려해 무상대차계약과 재해보상책임보험 등을 토지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 현이 비영리단체(NPO)와 산림조합에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연보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기업, 개인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함

2. 미국의 내셔널트레일(NTS: National Trai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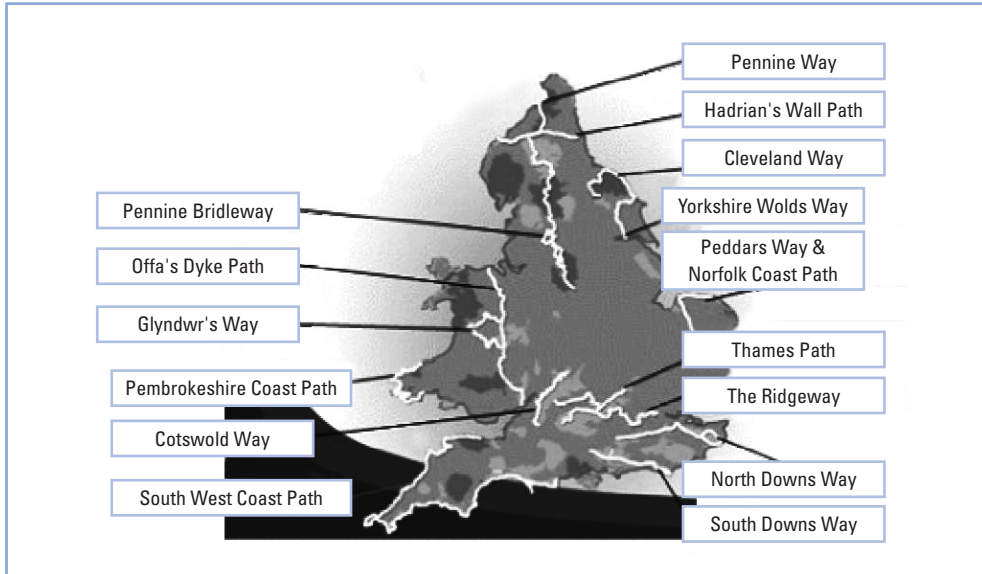
- 1968년 「내셔널트레일법」(National Trails System Act)에 근거해 조성되는 탐방로로서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의 조화로운 보존,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욕구 충족, 공공의 접근과 시민 참여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함
 - 내셔널트레일은 아름다운 경치 트레일(National Scenic Trails), 역사 트레일(National Historic Trails), 레크리에이션 트레일(National Recreation Trails) 등 세 가지 유형의 탐방로로 구성되며, 이와는 별도로 각 탐방로를 이어주는 연결 트레일(Connecting or Side Trails)이 있음
- 연방정부는 1995년 여러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내셔널트레일협의회(PNTS: Partnership for the National Trails System)를 설치함
 - 협의회는 탐방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공·민간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내셔널트레일법」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자원봉사자의 공급, 주정부와의 협력 등이 이루어짐
- 내셔널트레일의 운영·관리는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단체 등 기관별 역할 분담이 명확함
 - 제도적·정책적 지원·관리를 맡은 연방정부는 내셔널트레일의 운영·관리를 특정 연방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내셔널트레일법」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게 됨
 - 주정부는 관련 제도를 제정하고 주 전체의 탐방로계획(States Trail Planning)을 수립하며 탐방로 관련 산업에 세금 공제혜택을 주거나 유지·관리에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민간단체는 주로 현장관리를 담당하는데, 정부기관과 시민들의 파트너십으로 탐방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영국의 내셔널트레일(National Trails)

- 도보, 자전거, 승마 등의 활동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장거리 탐방로로서 총연장 길이는 4천여km에 달함
 - 1965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도입되어 퍼나인웨이(Pennine Way)가 내셔널트레일로 처음 선정되었으며, 2012년 현재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과 스코틀랜드 지역에 각각 15개와 4개의 탐방로가 지정됨
 - 노선의 대부분은 자동차 도로를 피해 숲속으로 나 있어 탐방로가 자연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여러 마을을 경유하므로 지역주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점이 특징임
- 내셔널트레일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따라 도보길(footpath), 승마길(bridleway), 마차길(byway)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도보길은 오로지 걷기만이 가능한 길로서 말이나 자전거의 통행은 허락되지 않는 탐방로이고, 승마길은 도보, 말, 자전거 이용자가 통행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오토바이, 마차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탐방로를 말하며, 마차길은 모든 교통수단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주로 도보와 말 이용자가 통행하며 대부분 비포장으로 자동차가 이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탐방로를 의미함

영국의 내셔널트레일 현황도



- 내셔널트레일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및 실행체계가 명확하게 구분됨
 - 중앙정부는 내셔널트레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지방정부 및 국립공원사무소는 운영 및 관리계획을 매년 또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함
- 국가적으로 내셔널트레일의 안내체계를 공식화하여 로고, 문건 양식, 글자체까지 적용함
 - 모든 탐방로에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도토리 모양의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은 도토리를 내셔널트레일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탐방객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보길은 노랑, 승마길은 파랑, 마차길은 빨강 등 화살표의 색깔을 각기 다르게 표시함
- 영국의 내셔널트레일 홈페이지는 탐방로 노선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2009년에 타임즈(The Times) 100선 여행 웹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함
 - 홈페이지는 위치, 거리, 지형, 관광명소에 대한 자료, 개별 여행을 위한 안내서,

여행사 링크를 통한 여행 설계 등을 지원하며, 관광객들이 거리 및 위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거리표와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4. 프랑스의 랑도네(Randonnée)

- 프랑스를 대표하는 걷는 길의 대명사, 랑도네²⁾는 자연의 발견과 운동의 즐거움이 한데 어우러져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랑도네 인구는 해마다 10%씩 증가하는 추세임
 - 전 국토에 걸쳐 탐방로가 정비되어 있으며, 경치가 아름다운 곳, 역사·문화 유적지 등 다양한 자원과 연계됨
- 랑도네는 노선의 연장거리 및 공간 범위에 따라 전 국토 규모의 장거리 랑도네(GR: Grande Randonnée), 지역·광역규모의 중거리 랑도네(GRP: Grande Randonnée de Pays), 도시 규모의 단거리 랑도네(PR: Petite Randonnée)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고, 이와는 별도로 장거리 랑도네와 인접 국가를 연결하는 탐방로(E: itinéraire Européen)가 있음
- 랑도네를 지정하고 운영·관리하는 일은 프랑스랑도네협회(FFRP: Fédération Française de la Randonnée Pédestre)가 담당하며, 이 기관에서 제안한 탐방로 코스의 총연장 길이는 약 18만km 정도임
 - 탐방로 대부분은 프랑스랑도네협회 회원들이 답사하여 제작한 토포가이드(Topo-guide)라는 이름의 안내책자에 상세히 설명됨
 - 이 책자에는 해당 지역의 지도, 지형, 구간별 소요시간, 생물, 대피소, 숙박시설, 볼거리, 유의사항 등이 수록됨
- 최근에는 많은 시민들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대도시형 랑도네를 찾고 있음
 - 특히 파리는 유적지와 유명 건축물이 많이 있어 도시 전역에 180km의 랑도네가 개발되어 있음

2) 사전적 의미는 '자연을 산책하면서 신체를 단련하는 걷기 운동'이다.

- 가까운 곳에서 랑도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개발되기 시작한 도심형 랑도네는 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 릴, 투르 등의 다른 대도시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

5. 뉴질랜드의 워크웨이(Walkways)

- 1975년 제정된 「뉴질랜드워크웨이법」(The New Zealand Walkway Act)에 근거해 야외에서의 즐거움 향유, 역사·문화 체험,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교외지역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도보 중심의 길을 의미함
 - 약 1,200km에 이르는 125개소 이상의 워크웨이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국토 면적의 약 1/3에 해당하며, 공유지와 사유지를 포괄하고 도시에서의 접근성이 비교적 좋다는 특징을 가짐
- 워크웨이는 노선의 연장길이, 이용의 난이도 등에 따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쇼트워크(Short Walk), 오지여행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워킹트랙(Walking Track), 산악지대를 가로지르는 트램핑트랙(Tramping Track), 오지여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루트(Route)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뉴질랜드워크웨이법」에 근거해 환경보전부(DOC: Department of Conservation)가 워크웨이를 계획하며, 수립 과정에서 민간단체·원주민·토지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침³⁾
- 중앙정부가 워크웨이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지원·관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설치해 현장을 관리함
 - 환경보전부장관이 「뉴질랜드워크웨이법」에 대해 종합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면서 워크웨이 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및 하위 법률에 의해 워크웨이를 운영·관리함
 -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된 별도의 관리 기구는 환경보전부의 작업을 모니터링 하고, 새로운 워크웨이를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현장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

3) 고고학적 특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노선이 설정되는 경우, 환경보전부와 역사유적트러스트(Historic Places Trust), 고고학회(Archaeological Association), 원주민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6. 정책적 시사점

- 국외의 걷는 길은 공간 차원, 코스의 소요시간과 난이도, 교통수단의 통행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을 구분한 점이 특징임
 - 공간 차원에 따라 국토 단위, 광역·지역 단위, 도시·근린 단위 등 다양한 위계로 구성되며, 각 단위의 걷는 길은 그 역할과 기능이 존재함
 - 공간적 위계에 따라 영국은 지방(local)-지역(regional)-국가(national) 등으로, 프랑스는 노선의 연장거리에 따라 장거리 랑도네(GR), 중거리 랑도네(GRP), 단거리 랑도네(PR) 등으로 유형을 구분함
 - 일본의 장거리자연보도는 크게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되는데, 간선도로는 다시 하루 코스와 연속코스로, 지선도로는 접근용이보도, 우수경관보도, 자원연계보도 등으로 세분됨
 - 뉴질랜드는 코스 이용의 숙련도에 따라 유형화하였으며, 영국은 도보와 승마, 자전거 등 교통수단의 이용 통행권을 엄격하게 구분함
- 국토 차원의 걷는 길 사업을 추진한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연계·협력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정부가 권역을 지정하고 걷는 길의 조성 기준 등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거나 민간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등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 운영·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프랑스 랑도네의 경우 민간단체인 랑도네협회가 걷는 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특징임
- 걷는 길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살펴보면, 국가마다 다른 특징을 나타냄
 - 일본과 프랑스는 명확한 근거법 제정보다는 관련 개별법을 통해 걷는 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별도의 법률 없이 내셔널트레일 기준을 통해 운영·관리가 이루어짐
 - 반면에 뉴질랜드는 1975년 「뉴질랜드워크웨이법」을 제정하여 뉴질랜드의 걷는 길, 워크웨이를 운영·관리하고, 보행서비스 표준지침을 통해 걷는 길 조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설정함

- 법률 및 제도적 장치 안에서 걷는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특성뿐만 아니라 공간적 위계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 걷는 길을 세분하고 유형별로 계획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로 자연자원의 가치를 평가하여 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관리지침을 개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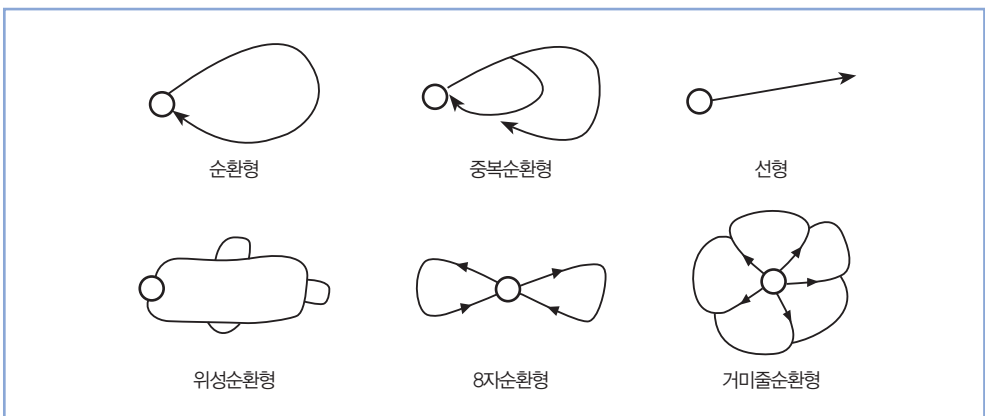
IV. 걷는 길 조성사업의 추진 실태

1. 계획 및 조성 부문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걷는 길 조성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길 사업의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부처의 사업들도 동시에 진행되는 문제가 나타남
 - 정부부처별로 사업의 목적과 자원 확보 방안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이 미흡함
 - 탐방객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걷는 길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전국의 좋은 길에 선정되기 위해 자기 시·군 안에 있는 길만 신청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군의 경계를 넘나드는 고갯길이 전국의 좋은 길에 선정되는 경우가 드물음
 - 2010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명품녹색길 사례만 보아도 총 33개의 길 가운데 시·군 경계가 포함된 길은 ‘안반덕 배추밭길’과 ‘이순신 백의종군로’ 등 두 군데에 불과함
-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를 넘어 곧바로 실시설계부터 들어가는 등 사업들이 조급하게 추진되는 문제가 나타남

- 실시설계마저도 용역의 입찰 업종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걷는 길 조성이 시설 설치 등의 물리적 설계·계획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탐방로, 숲길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을 연결하는 기본계획이 없어 지역 전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짧은 기간에 추진되는 대부분의 단일사업의 경우 노선 선정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음
 - 길의 조성 목적과 노선 선정의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만 원칙에 근거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는 미흡함
 - 이는 길 조성의 원칙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통일성을 갖춘 길 조성을 어렵게 하고 길 주변의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걷는 길 노선의 유형에는 순환형, 중복순환형, 선형, 위성순환형, 8자순환형, 거미줄순환형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유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대부분의 노선은 출발점과 종착점이 다른 선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선형노선은 탐방객이 거점지역을 출발하면 회귀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 거점지역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걷는 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거나 마을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함

걷는 길 노선의 유형



- 인위적으로 길을 내는 과정에서 원칙 없이 길을 확·포장하거나 인공시설물을 과도하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 길과 길을 잇는 과정에서 사유지 문제는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함
 - 길은 대체로 공유지이지만 사유지를 경유할 수도 있으며, 길이 사유지와 만나 우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도시지역에서의 걷는 길은 도로에 의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음
 - 서울특별시의 '서울 한양도성길'은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고, 이후 전차가 놓이고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는 등 한양도성이 지나가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음
 - 한양도성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현재 복원된 길을 중심으로 길을 이어나가되 단절된 성곽은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여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걷는 길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길 자체의 연결에만 중점을 두었지, 주변 지역과의 연계에는 소홀해 왔음
 - 지리산둘레길의 경우 길이 경유하는 지역에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이들 자원과의 연계성은 약한 편임
 - 제주올레의 경우 다양한 자연자원을 잇는 길이라는 성격이 강하지만 올레길 외곽의 자원과는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2. 운영 및 관리 부문

- 제주올레와 지리산둘레길은 각각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사단법인 숲길'이라는 민간 단체에 의해 걷는 길이 운영·관리되고 있음
 - 제주올레는 민간이 올레길을 발굴하여 길 조성사업을 성공시킨 좋은 사례로 평가됨
 -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몇 명의 상근직원을 두어 올레길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함

- 지리산둘레길은 환경운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기본계획 및 실시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우리나라 길 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며, 운영·관리 전담 직원도 전문화된 인력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길 조성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하는 인력으로 구성됨
-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의 불안정성은 걷는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임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또는 민간 부문의 후원금이 없는 경우에 걷는 길 조성사업은 중단될 수 있으며 조성된 이후에도 운영·관리가 어려워짐
 - 걷는 길 조성사업은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어 외부의 지원 없이는 걷는 길 운영·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재정적 독립이 어려움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걷는 길 조성사업이 대체로 길을 조성하는 데 편중되어 운영·관리 인력은 자원봉사의 형태로 충원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음
- 걷는 길의 운영·관리 인력은 비상근 또는 임시직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업무를 겸하는 형태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음
 - 운영·관리 주체가 업무를 착수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운영관리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장기발전계획 및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미진한 문제점도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지리산둘레길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업에 직접 참여케 하고 상근 직원을 두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그렇지 못한 형편임
 - 전국 차원에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걷는 길 조성 과정에서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성 이후에는 방문객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지리산둘레길을 조성하는 과정에 마을로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
 - 제주올레의 경우 올레길이 사유지와 만나 노선을 우회해야만 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함

-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갈등 문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음
 - 걷는 길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지리산둘레길은 주민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됨
 - 마을주민이 노선 선정 과정에 참여했고, 이후 조성이 완료된 구간에서는 마을주민이 방문객에게 둘레길을 알리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음

3. 법제 기반 부문

- 걷는 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현재 하나의 법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 걷는 길 조성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 이들 법률에서는 걷는 길과 관련한 개념으로 ‘탐방로’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법률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
 - 이러한 배경에서 걷는 길 조성사업과 관련한 개별 법률의 목적을 검토하고, 각 법률에서 말하는 탐방로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자연자원 중심의 걷는 길은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크게 부합해 보이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탐방로는 도로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모호하게 규정됨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이구역 안에서는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들 시설에는 탐방로 등의 도로도 해당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
- 「자연공원법」에서 말하는 탐방로도 「자연환경보전법」과 마찬가지로 공원시설의 하나로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한계를 보임
 -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들 시설에는 탐방로 등의 도로도 해당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걷는 길과 관련하여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등 숲길’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숲길이 ‘산림공익시설’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규정됨
 - 이 법에 의하면 숲길은 요존국유림, 즉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에도 설치할 수 있는 산림공익시설로 구분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는 걷는 길과 관련하여 ‘숲길’이 명시되어 있고, 이 길에 대해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 그리고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숲길의 종류는 그 목적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탐방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자연공원법」에서 말하는 탐방로와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전용(山地轉用)이 제한되는 곳에는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따르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나 산림공익시설 등과 같은 예외적인 시설에는 허용되기도 하며 이들 시설에는 탐방로도 포함됨
 - 시행령에는 탐방로라는 용어가 두 번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이고, 두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숲길의 한 유형으로서 탐방로임
 - 전자의 탐방로는 「자연공원법」에서 명시되어 있듯 도로의 하나로 간주되고, 후자의 경우는 산책로·등산로와 함께 숲길의 하나로 「자연공원법」에서 말하는 탐방로와는 다른 개념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걷는 길과 관련하여 ‘등산로’와 ‘연결녹지’의 용어가 명시됨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등산로의 조성이 허락되는데, 법에는 등산로가 체력 단련시설의 하나로 규정됨
 - 또한 녹지의 한 유형인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로 법에 정의되어 있음
 - 이것은 오늘날 선진도시에서 파편화된 녹지를 녹색길의 형태로 연결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린웨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판단됨

V. 걷는 길 조성사업의 개선 방안

1. 걷는 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걷는 길 조성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걷는 길 조성계획의 표준모델을 제시해야 함
 - 환경부는 전국 단위 생태탐방로 조성에 표본을 삼고자 2008년 제1차 시범대상지로 안동시의 퇴계 오솔길을 선정한 바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걷는 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걷는 길 조성 기본계획은 걷는 길 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속가능한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해 중요하며, 지역으로부터의 상향식 계획이 요구되는 과정임
 - 최근에는 걷는 길이 산책로 수준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지역계획의 관점에서 걷는 길과 지역발전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지역 차원의 걷는 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광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이는 전국 단위의 걷는 길을 구축할 때 일관성 있는 사업 제안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걷는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걷는 길 연결성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역계획의 수립이 더욱 요구됨
- 국토 차원의 걷는 길 조성사업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국토 차원의 걷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에 걷는 길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토 차원에서 조성되어야 할 걷는 길이 선정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에는 걷는 길 조성의 목적, 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노선의 선정과정, 걷는 길의 신청 및 승인, 사업 추진기관의 역할, 다른 계획과의 관계, 자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걷는 길 자원의 심층 발굴

- 걷는 길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려면 걷는 길에 지역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을 대표하는 길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연 및 역사·문화가 길에 반영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걷는 길 주변 지역에 대해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등을 먼저 조사해야 하고, 길 자원이 갖는 콘텐츠의 목록을 정리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길과 관련한 어르신의 경험담이나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 등 역사·문화가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
 - 길에는 역사·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자연자원도 포함되며, 방문객들이 걷는 길을 생태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징이 탐방객들에게 관심 주제가 될 것이므로 지형, 기후, 생물지리 등과 관련한 지역 정보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스토리텔링 작업으로 걷는 길에 장소의 의미를 부여해야 함
 - 걷는 길을 조성할 때에는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함
 - 자원의 목록을 정리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며, 문헌 조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길에 담긴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므로 길의 역사를 알고 있는 주민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증언을 서둘러 기록해야 함
 - 시민들에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도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스토리텔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보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가 잘못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 판단됨
- 걷는 길의 노선 선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함
 - 하나의 주제로 일정한 방향성을 따라 노선이 놓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현지답사를 통해 노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걷는 길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단계부터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것은 향후 사유지 토지소유주와 협의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며 운영·관리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함

3. 사업효율화를 위한 행정과 민간의 역할 설정

- 조성이 완료된 걷는 길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이들 사이에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함
 - 우수한 자원을 반영한 걷는 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행정과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 행정은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민간은 걷는 길을 발굴 및 운영·관리하고 해설사를 양성하며 걷는 길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노선 선정을 위한 수십 차례의 예비답사, 지역주민의 협조 및 행정의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길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제주올레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걷는 길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은 지역주민을 자원봉사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행정 시스템의 최소화 및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걷는 길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걷는 길 사업 전담 조직은 가칭 '걷는 길 사업팀'이라 명명하여 팀장급을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하부 조직을 계획 부문, 조성 부문, 운영·관리 부문, 전문연구 부문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걷는 길 사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팀 조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 걷는 길 사업에서 지속적인 운영·관리의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
 - 민간 주도로 걷는 길을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설 관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그 외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민간단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 지역에 걷는 길이 경유하는 경우 주민 건강의 증진과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걷는 길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지역 차원에서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 간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 기본계획 수립, 시설의 실시설계,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의 보존·복원 대책 마련, 걷는 길 정비 등은 공공 부문에서, 탐방객 안내, 해설가 양성 등은 민간 부문에서 담당하여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
 - 노선을 선정할 때에는 사유지의 토지소유자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걷는 길의 운영은 공공보다 민간 부문이 체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민간 부문은 제주올레와 지리산둘레길 사례와 같이 운영·관리 주체를 사단법인화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사료됨
- 걷는 길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자원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적 자원을 양성해야 함
 - 제주올레나 지리산둘레길, 서울성곽길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사례인 것으로 판단됨
- 지리산둘레길을 운영·관리하는 사단법인 숲길은 지역주민을 ‘길동무’라 불리는 해설가로 양성하기 위해 지리산둘레길의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설가는 길을 안내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리산을 삶의 터전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던 만큼 지리산에 얽힌 여러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과 함께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탐방객의 만족도는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지리산둘레길의 ‘길동무’ 사례를 모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적극 활용하여 걷는 길 해설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은 지역을 경유하는 길에 대한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 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임
 - 지역주민을 활용한 해설가 양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장소애(場所愛) 형성과 함께 지역 일자리의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걷는 길의 효과적 정보체계 구축

- 탐방객들에게 걷는 길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길 지도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지도에는 걷는 길 노선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걷는 길 지도의 제작을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참고할 만한 지도의 좋은 모델로는 전라북도의 진안마실길 지도를 들 수 있음
 - 이 지도의 경우 인간미가 느껴지도록 그림으로 제작되었는데, 구간의 개략적인 설명, 난이도 및 관광자원의 간단한 해설, 찾기 어려운 길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등이 덧붙여 있어 길이 경유하는 장소 콘텐츠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구성한 점이 돋보임
- 탐방객들이 온라인으로도 걷는 길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웹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는 생태정보시스템(<http://ecoinfo.seoul.go.kr>)을 통해 서울시가 선정한 걷고 싶은 길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를 모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수치지도 또는 위성사진에 걷는 길 노선을 표시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걷는 길을 상징하는 마크, 로고 등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이를 공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걷는 길의 마크나 로고는 국립·도립·시민공원 등의 그것과 상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다양한 마크, 로고가 포함된 안내판을 제작하여 탐방객들의 혼동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지리산둘레길의 경우 솔방울을 상징으로 한 로고를 만들었고, 안내 유도 말뚝은 길이 경유하는 5개 시·군을 각기 다른 색으로 나타내 현재 탐방객이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지역으로 걷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함
 - 제주올레는 제주도 초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랑말을 형상화하여 로고를 만들었으며 파란색 화살표와 리본을 이용하여 길을 안내하고 있음
 - 걷는 길의 안내는 노선의 시작 지점과 걷는 방향, 중간 방문 지점, 종착 지점, 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탐방객에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한편 탐방객들이 직접 길을 찾아 걸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보를 정리한 안내 책자가 제작되어야 하며, 안내소에는 이러한 책자들이 상시 구비되어야 함

5. 사회적 일자리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고용 창출

- 걷는 길 사업은 길 주변의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가령 걷는 길 사업의 전담 인력 또는 사업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인력 등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사업,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과 산림서비스증진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걷는 길 사업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 왔음
 - 하지만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했던 서울 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임
- 걷는 길과 관련한 사회적 일자리는 조성 및 운영·관리 등 단계별로 일자리를 구분할 수 있으며, 업무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역할을 정할 수 있음
 -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 조사, 걷는 길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자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임
 - 업무의 특성상 유연근무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노인, 장애인, 퇴직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걷는 길 관련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임

- 걷는 길 사업은 지역의 관광서비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유형에 해당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걷는 길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의 일부가 지역발전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걷는 길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사단법인 울진숲길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공모를 통해 각각 제주올레 기념품공장과 울진숲길카페 등이 선정되어 걷는 길과 관련한 사업에 재정 지원을 받기도 했음
- 지방자치단체는 걷는 길과 관련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걷는 길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걷는 길 관련 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6. 걷는 길 조성사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률 정비

- 걷는 길의 개념과 위상,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각 법에는 고유한 목적이 존재하므로 기존의 틀을 해치지 않으면서 발전적인 개념의 걷는 길이 도입되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함
 - 개별 법률마다 의미상 차이가 나타나 혼선이 있는 탐방로 용어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임
 - 「자연환경보전법」에는 탐방로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중에서 생태·경관전이보전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탐방로 활성화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단기적으로 기존의 개별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들 개별법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 통합법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걷는 길의 유형과 개념, 국토 및 지역 차원에서의 걷는 길 사업, 걷는 길의 구체적인 운영·관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걷는 길 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걷는 길 정책의 추진방향 및 지침 제시, 노선 지정, 사업의 평가 등의 기능을 맡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는 걷는 길을 실제적으로 정비하고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주민은 걷는 길의 운영·관리에 참여하고 해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적 발전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Focus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 중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www.krila.re.kr

2011

- 연구총서 (통권 457) 지방세제의 선진화 -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통권 456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 통권 455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 통권 454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 통권 45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 통권 452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 통권 45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2010

- 연구총서 (통권 450)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 통권 449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 통권 448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개편
- 통권 447 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 통권 446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 구축
- 통권 445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 통권 444 2020년 지방자치제도 발전모형

2009

- 연구총서 (통권 443)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소득세
- 통권 442 저탄소녹색성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 및 극대화 방안
- 통권 441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자산 측정 및 관리 방안
- 통권 440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전략
- 통권 439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 통권 438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
- 통권 437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 통권 436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성과 및 행정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통권 435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례연구
- 통권 434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질서 확립방안: 주차질서를 중심으로
- 통권 433 유비쿼터스 기반의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통권 432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운영실태 및 효과성 분석
- 통권 431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 통권 430 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 통권 429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 통권 428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지방자치법 60주년의 회고와 과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 TEL. 02-3488-7399 FAX. 02-3488-7309